

4.11총선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천 영 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4.11총선이 끝난지 두달이 지났다. 민중운동이나 노동운동쪽에서는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과 모자라는 시간 속에서도 나름대로 후보전술을 구사하며 이번 총선에 대처했고,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는 자체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진영은 민주노총의 출범 속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노동계 1000인 정치선언, 민주노총소속 후보 및 지지후보에 대한 지원 등 나름대로 정치활동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현재 민중운동진영이나 노동운동진영 내부에서 총선투쟁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나름대로의 진단을 통해 보다 나은 활동을 펼쳐려 노력할 것이므로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는 해당 주체들에게 맡기고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왜 필요한가?

우선, 사회의 경제·사회·정치적으로 근본적 개혁 없이는 노동자의 경제·사회적인,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권익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임금인상 아무리 해봤자 물가 오르니까 도로아미타불이더라”는 노동자들의 자각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또, 근로자파견제, 신경영전략 등과 같은 자본측의 새로운 공세들

에 대한 대응, 주택문제, 교육문제, 제반 사회보장문제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에 대한 대처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요청하고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임금인상투쟁이 경제투쟁의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극복해야하는 정치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한국적 특수성이 또한 정치세력화를 요구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 잇단 붕괴사고, 비자금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실과 부패, 부정 등은 총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총체적인 사회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정치세력들은 날이 갈수록 보수화되어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개혁과제들을 받아 안고 수행할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틀은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넘어서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정치조직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나라의 자주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수년간 보수 정치세력들이 벌여온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나라의 자주화와 통일은 노동자와 민중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지난날 노조운동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정치·정책적인 요구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정치·정책투쟁의 한계는 명확했다. 우선, 집회와 시위 등 대중운동 방식에 의한 정치활동만으로는 의회라는 제도정치를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과 제도의 제·개정에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또, 노동조합의 정치·정책활동은 보통 임금·단체협약투쟁 시기에 지역 여론을 의식하여 벌어지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결합한 활동이 되지 못하고 임금·단체협약투쟁 시기에만 반짝하는 듯한 활동으로는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체의 전면화라는 정치적 조건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권력은 보다 분권화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자결권도 커질 것이다. 선거를 통해 특정 정치세력을 심판하거나 선택하는 일이 국민들의 삶에서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집회나 시위투쟁의 방식만으로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지역정치구도를 유리하게 조성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해내는 일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 6.27 지방자치선거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민중후보, 노동자후보를 당선시킨 바 있다. 과기노조의 경우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정당들이 철저히 보수화되어 간다는 점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시급히 요구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들까지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5·6공 시절 인사들까지 영입하고 있다. 야당의 정강·정책도 노동악법의 철폐 유보, 국가보안법 철폐 유보, 신재벌체제 인정 등 앞다투어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내용으로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할 정당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고, 대안적 정치세력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는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사회세력화+정당조직화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세력화란 예를 들어 민주노총의 확대 강화, 노동운동의 민주적 재편과 통일, 산별노조의 건설, 아울러 사회개혁투쟁,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활동, 정치활동의 강화 등을 이르는 것으로써 모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촉진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운동의 본성이며 기본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노동자의 집권을 이루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분단상황은 이를 매우 어

려운 과제로 만들고 있다. 외세가 군사적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현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당장 서구식의 노동자계급정당의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자주민주통일의 대의를 함께 하는 각계 각층 민족민주운동세력과 함께 정치조직을 건설하고 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정치조직의 필요성과 조직 건설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노동자 정치세력화 하면 서구식의 노동자정당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조건상 단선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처지에서는 남아프리카에서의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경험들이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남아프리카의 노동조합총연합체인 코사투(COSATU)가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가졌던 관계, 즉, 노동자세력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민주세력의 연대조직을 통한 집권 경험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있어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주도적이고 절대적인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제민주세력의 연대와 정치조직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룰 단위, 즉 노동자 정치조직의 필요성이 의당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노동자 정치조직의 필요성,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세력화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서는 지난 시기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정치세력화 경험을 총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민중당,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개혁신당 등의 경험을 총괄해 보면 구성주체를 어떠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무엇보다도 동요하지 않는 민족민주운동에 일관되게 헌신해 온 기층세력의 역할이 취약했다는 것이다. 현재도 여전히 그러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세력화

에 있어서는 단련된 선진노동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이 활동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조직화는 과거와 같이 청년들이나 소시민계급에 의해 이끌릴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노동자 정치조직은 전체 민중정치조직과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현장대중을 상대로 한 대중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임무를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지난 시기 정치세력화가 정치활동만 하는 사업방식으로 말미암아 현장으로부터 유리되었던 교훈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정치조직은 계통적이고 일상적으로 노동자의 정치의식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지역의 민중정치조직과의 연계 및 그 안에서의 활동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주도성을 실현해 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민족민주정치조직과 민주노총과의 연계를 어떻게 강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 정치조직은 민주노조운동을 정치적으로 안내하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치조직은 입법이나 의회활동에만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기층대중조직과 한몸이 되어서 기층대중조직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그 투쟁을 엄호하고 민족민주운동진영과 결합하여 그 운동을 올바르게 견인하며, 대중운동을 올바르게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조직의 과제

우선 운동내부의 분열상을 극복하는 문제, 다른 계급·계층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내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위력적인 정치조직건설은 매우 어렵다. 노동자 정치조직은 대중운동속에서 경험하고 축적 검증된 과학적 이론, 정책, 교훈들을 올바르게 구현해서 물계급적 운동론이나 뿌리깊은 분파주의 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조직은 대기업과 같은 전략기업, 공단지대와 같은 전

략지구, 그리고 민주노총 조직에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연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체 민중을 정치조직 혹은 정당으로 올바르게 안내하고 통일시켜 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그리고 다른 부문의 정치조직, 정치활동가들의 처지와 조건을 충분히 조사·연구해서 이해하는 바탕에서 접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그리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정치활동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87년 6월의 민주항쟁과 7,8월의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물들이 선거 때마다 도둑질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겪어 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조합 따로, 정치 따로 식의 노동운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운동의 본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